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지식·정보’ 체제로 확대 개편

정부가 특정업종에 직접 개입, 기술개발·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던 산업합리화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86년 이후 공업발전법에 의해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업정책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이나 산업기술개발자금 등 정부의 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과거의 제조업에서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 기업·대학·전문연구기관 등이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일정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실기업을 사들여 가치를 높여 되파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등록여건이 최소화되며 사채발행한도 특례(회사채의 10배), 지주회사 특례(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률제한 제외) 등이 적용되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조정,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심의 기구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이번 산업발전법은 지식산업화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 이외에 유통·물류·연구개발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분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전비전을 5년 단위로 탄력 운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특히 공업발전법에서는 합리화 대상업종에 대해 생산성향상, 연구개발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시책을 폈던 반면 산업발전법에서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도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 산업정책 대상업종 확대

공업발전법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했으나 기술의 복합화, 융합화에 따라 업종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으로 대상업종을 넓혔다.

이에따라 물류·유통·연구개발·광고·경영컨설팅·영상·방송 등 서비스산업도 정부의 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 국제산업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산업발전법에서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 산업정책 차원에서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때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인수·정상화·매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으로 구조조정의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기 위해 등록요건을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채발행특례, 지주회사 특례의 적용과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투자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 ■ 산업발전비전 제시

공업발전법의 경우 10년단위로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토록해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산업발전법에서는 이를 5년단위로 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발전비전을 수립키로 하고 8월말까지 50개 업종에 대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갈등의 요인인 지역간 산업불균형의 폐단을 막기위해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지사가 산자부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 설립되는 중소기업과 공장, 수도권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자원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강화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40억원을 확보, 추계 컴덱스, 홍콩섬유직물박람회 등 740여개 중소기업체의 47개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지원예산은 質公을 포함해 당초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총 2,200개 업체가 117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산자부는 추경예산 40억원을 활용해 미국 라스베가스 추계 컴덱스, 홍콩섬유직물박람회 등 47개 전시회에 참가하는 641개 업체에 대해 1.5부스 한도내에서 부스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무공·업종단체에서 바이어유치, 홍보, 전시품통관, 상담 등의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 등 한국관 구성이 곤란한 업체

100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벤처기업 및 첨단제품 관련 전시회 참가업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대상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업체들의 수가 경쟁국의 1/10~1/30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시회를 통한 수출확대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올해 전시회를 통한 수출계약이 당초의 4억3,400만 달러에서 6억6,4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99개 업체 추가선정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99개 업체에 대해 기술혁신개발자금 5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19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지난 3월 745개 업체에 400억 원을 출연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추경예산의 지원업체 99업체를 선정하여 50억원을 출연(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중복지원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5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정부출연금의 50%)을 지급하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결과 기술개발 진행상태가 우수한 업체는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신청업체 급증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많은 업체가 탈락함에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50억원)을 확보·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출연하는 자금으로써, 용자와 달리 담보가 필요 없으며, 개발성공시에 출연금의 30%만을 기술료로 징수(1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의 주체가 됨으로써 현장 필요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성과가 중소기업에 귀속되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사이버경영·기술컨설팅 실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식경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사이버(cyber)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 2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 및 경영·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전문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이버컨설팅이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널리 확산되고 지식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컨설팅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컨설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시행중인 기업 방문지도와 병행하여 정보화와 지식경영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지도를 받을 수 있어 24시간 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경영정보 취득과 애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컨설팅업체가 보유한 지식경영 D/B를 기업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금년에 우선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경영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업체당 소요비용 5백만원중 약 2백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또한, 「지식경영인식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컨설팅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지식경영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경영에 대한 홍보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각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지식경영추진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지식경영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

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업체는 지식경영 D/B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청의 전문인력 POOL에 등록된 인원을 확보한 경우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사이버지식경영 컨설팅사업의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수요 파악, 운영시스템 확립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2000년부터 동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品目別 技術水準 評價 실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개별 품목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세계 일류수준과 비교·분석하는 평가작업이 '99. 5월부터 '99. 11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려고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대외 진출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가 하면 기술격차의 정도와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별로 당해 분야 기술전문가 2~5명으로 정밀 진단팀을 구성하여 KS(한국), JIS(일본), ISO(국제) 등 국가 또는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국내 제품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민간 기술전문 연구기관, 국립기술품질원 등 평가기관은 해당 품목의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표본업체에 대한 정밀 진단, 기타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 생산 현장에서 수준평가를 위한 업체 정밀진단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파악되면, 이를 평가본부(중기청 기술정책과)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기술개발, 기술거래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를 소상히 제공할 예정이다.